

# ‘5·18정신 전문수록’ 개헌 또 미뤄지나

### 국힘, 중동사태 등 빌미 지선 이후 논의 주장 우 의장 제안 지선 동시 개헌 추진 일단 멈춤

여야는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며 지선 이후 논의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과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비쟁점 내용만을 담아 6·3 지방선거와 동시 진행하려던 개헌은 일단 무산됐다.

추후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성사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원내 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39년이나 된 낡은 개헌의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로, 여야가 국가 미래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에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강화, 비상계엄 재발 방지 등 비쟁점

사안만 담겠다”며 “쟁점은 피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생과제도 굉장히 시급하고, 여러 현안들도 있다. 개헌을 과연 논의할 시점이냐는 점에서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은 군사 작전하듯 날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6·3 개헌 투표 재고를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해 좀 더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고 중동 전쟁이 유가나 물가를 자극해 국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헌이라는 큰 과제가 떨어지면 모든 논의가 ‘개헌 블랙홀’로 빠져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우원식의 의장이 제안한 ‘불법 비상계엄은 공포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는 제안을 환영한다”며 개헌을 통한



▶ 전남도청 복원 현장 찾은 임택 동구청장과 공직자들 12일 오전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찾은 임택 동구청장과 공직자들이 도스트의 안내로 주요 복원 공간인 본관 건물과 경찰국, 상무관 등을 살펴보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상징성 공유와 공직자의 역사·인권 의식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그동안 개헌을 가로막아 온 제도적 장애가 해소됐

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의 결단”이라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제안은 현실적이면서도 국민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

고 밝혔다.

또 “특히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정치권이 국민 앞에 여러 차례 약속해 온 사안”이라며 “이번 개헌이 최소 수

준의 단계적 개헌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헌정정신을 확립하는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여순사건 미처리 3294건 속도전...전남도 “법정기한 전 마무리”

### 지원시스템 고도화·유선조사 확대...조사·심의 효율화 중앙위·시군 협력 강화해 진상규명·명예회복 추진 박차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절차를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마무리하기 위해 조사·심의 체계 전반의 효율화에 나선다.

전남도여순사건지원단은 희생자·유족 지원 업무에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해 남은 신고 건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실무위원

회가 처리한 사건은 7585건으로, 전체 신고 1만879건의 약 70% 수준이다. 당초 목표였던 1·2차 신고 접수분 7465건 심의 완료 계획도 초과 달성했다.

전남도는 올해 3차 신고 3414건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3294건을 오는 10월 5일인 진상규명보고서 사건조사 법정기한 이전에 마무리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희생자·유족 지원시스

템을 고도화한다. 신고 접수부터 보완조사, 심사·상정,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손본다. 원거리 거주자의 추가 진술이나 간단한 사실 보완, 단순 오탈자 정정 등은 방문 조사 대신 유선 조사로 전환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반복적인 문서 처리 부담을 덜어 조사 인력이 현장 중심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사·심의 일정도 보다 촘촘하게 운영한다. 가능별 인력 재배치를 통해 남은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앙위원회

와 협력해 지역별 병행조사를 확대함으로써 조사 물량을 분산할 방침이다.

시군과의 협조체제도 강화한다. 전남도는 제적부 확인과 각종 신고 절차에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해 사실조사단 교육에 활용하고, 기초조사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길용 전남도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희생자와 유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신속하고 완전한 진상규명, 법정기한 준수, 피해보상 법제화 등을 중앙위원회와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3500억 달러 투자 이행 근거 마련

###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법’이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만이다.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천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 시장의 임기는 3년이며, 시장은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 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4세·7세 고시 금지법’ 통과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렀던 유아 학원의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영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유아학원에 등록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진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교육감 선거에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을 따르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딥페이크를 금지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선거 공정성이나 다른 공직 선거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 광주시, 교육부 ‘평생교육사업’ 내달 스타트

### 고령층 프로젝트 ‘내 일이 빛시나’...국비 4500만원 확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자치구·대학·기업 협력 선순환 구축

광주시는 교육부 주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 달 시작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자치체, 기초자치체, 지역 대학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성화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다.

광주시에 ‘내 일(My job, Tomorrow)’이 빛(光)을·시(시니어)·나(나눔)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집중 진흥지구’ 부문에 3년 연속 선정, 국비

4500만원을 확보했다.

광주시에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5개 자치구, 전남대·광주보건대·남부대 등 지역 대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 지역 기관·기업이 협력하는 프로젝트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층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재정의하고, 평생학습을 사회참여·경제활동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광주시에 총 사업비 1억5000만원(국비 45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올해는 그동안 축적된 네트워크와 자원을 바탕으로 대학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해 실전 역량을 키우는 평생현역 일자리 프로젝트, 지역의 가치를 기록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문화콘텐츠 제작) 등 3개 분야 교육 프로젝트를 강화한다.

각 자치구별로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운영해 학습의 결과와 단순 수료에 그치지 않고 취·창업 지원과 콘텐츠 제작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고도화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민주당 광주시당, 1차 기초의원 경선후보 40명 확정

### 17~18일 권리당원투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기초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후보로 40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경선이 실시되는 선거구는 서구(가/

다/라), 남구(가), 북구(가/나/마/바), 광산구(다) 등 총 9개 선거구로, 서구 다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각각 3명씩 총 26명을 선정한다.

경선 일정은 13일부터 16일까지 선거 운동 기간을 거쳐 17일부터 18일까지 ARS권리당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당선지는 18일 투표 종료 후 오후 11시 30분께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01호에서 9개 선거구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경선 진행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공명선거 준수사항 등 경선 운영 전반을 안내한다.

## 광주, 시민 2000명에 나무 세 그루씩 나눠준다

### 보리수·서향·동백 3종...16~18일 온라인 접수

광주시에 시민 1인당 나무 세 그루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올해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보리수나무, 서향나무, 동백나무 등 3종을 각 1주씩(1인당 총 3주) 나누어 줄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광주시 누리집(https://www.gwangju.go.kr) ‘나무 나누어주기 알림창’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광주시에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0명을 선정할 후, 20일 당첨자에

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배부 장소에서 당첨 문자메시지를 인증 후 나무를 수령하면 된다. 나무 배부 일시와 장소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호남조경수유통센터(서구 서창동길 322, 벽진동)이다.

전화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일(23·25일)에, 짝수이면 짝수일(24·26일)에 나무를 수령할 수 있고, 27일과 28일에는 전화번호와 관계없이 나무를 배부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1면 ‘특별시장 토론회’서 계속

정책배심원 토론회는 광주, 전남 서부, 전남 동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열리며 권역별로 30명의 정책배심원이 참여한 다. 패널토론과 정책배심원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배심원에게 별도의 투

표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별 TV토론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단체장을 가리는 경선 경쟁의 흐름을 좌우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요 후보들이 맞붙는 A조 토론 결과에 따라 경선 판세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